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기획 대선주자 집중토론회

민주당 안희정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특별법 만들자”

토론회서 함인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장

“시대교체로 자치분권국가시대 열자”



지난 14일 서울 국회 의원식당에서 안희정(맨 왼쪽) 충남지사와 광주일보 박지경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이 대선주자 초청 집중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패기가 넘쳤다.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한 지지율 때문이었지만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감 때문으로도 보였다. 그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도지사로서 현장에서 느꼈던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긴 긴 토론회 동안 안 지사는 참여정부 대통령 참모로서, 도백으로서 느낀 점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열정적으로 제시했다.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시대교체다. 박정희 시대의 낡은 대한민국 체제로부터 새로운 수준의 대한민국으로 넘어가자. 그 핵심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를 지방자치분권 시대로 혁신시키는 일이고 관 주도형 정부주도형 경제산업정책을 노동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끄는 협치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의회의 지도력과 정당의 지도력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치를 이루는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
- 개혁에 대한 입장은.
▲대선 전에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혁은 차기정부의 중요한 국가 개혁과제의 가장 첫 번째다. 이 개혁은 자치분권 개혁으로 가야 된다. 개혁특위와 국민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 개혁 논의를 모아 내는데 집중하겠다. 다만, 일정은 개혁 특위에서 얼마만큼 합의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임기 내에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대선전 개헌 불가능 ... 연방제 수준 분권해야

지방정부 재정·권한 확대 균형발전 이끌겠다

연정추진협·국정준비위 만들어 당 정책 조정

-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연방제에 가까운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하겠다.
-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생각은.
▲분단된 상황과 의사 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으로 놓고 볼 때는 대통령제의 뼈대를 유지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제 마음이 가 있다.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더 특화된 전략이 있는가.
▲현재 지방정부 사무의 80%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80%가량이 의존 재원이다. '여기다, 저기다 써라'는 식의 이미 규정된 돈이다. 지방자치기 아닌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주겠다.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피해는 지역에 다 가면서 혜택(가액)은 온 국민이 똑같이 보는 것을, 쉽게 말하면 에너지 산업 등이 있다. 부산·경남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고 충청남도도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왜 전기값이 똑같아야 하는가. 거리별산재 같은

것을 뒤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많은 물·공기·에너지 그리고 기본자재와 관련, 우리는 그 지역적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뭔가 시장(경제적)으로 그 가격(가치)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균형발전정책이 인위적 규제정책이 중심이었다면, 저는 시장적 법칙으로 균형발전의 기회를 확대해 보자는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신균형발전 전략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기회를 확보하고 불균등한 교환을 하고 있는 지역의 각종 생산물에 대해서 제 가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균형발전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 인수위 없이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데 집권 준비는.
▲우선 민주당이 연정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각 정당들과 논의해서 정책협의를 해야한다. 정책협상이 나오면 정부 구성에 대한 책임자를 서로 선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리 문제는 대통령 당선자와 이 정책협의체 정당 대표들과 속의 협의를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총리가 내각을 이끌어가면 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헌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 국정준비위원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당)후보가 된다면 연정추진 협의체와 국정준비위원회를 당에 뒤서 국정준비위원회는 후보의 정책과 당 정책에 대해 재조정해야 한다.
- 문재인 대선에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대세론은 사실이 아니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넘어본 적이 없다. 그냥 그동안 일등 해왔다는 것이다.
- 참여정부 초기 대북송금특검 수용과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해 평가한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고 나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결정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다만, 대북 송금특검을 통해서 고초를 겪었던 선배님들에 대해서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정치혁신을 위해서 출발했지만 끝내 실패에 실패했다. 우리 당의 발전과 혁신 과정에 있어서의 나름의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겠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 2국무회의를 만들어서 시도지사들과의 운영해보려고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너지밸리특별법 제정 관련 공감대 확산 토론회'에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함인선 교수는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미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 교수는 "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주요 내용으로 "정부가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 계획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시·도지사가 미리 협의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획을 수립해 클러스터도 지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산업자원통상부 소속으로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역협의회도 두도록 했다. 법안에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 지원, 에너지 중점 산업의 지정과 지원, 에너지 특화기업에 대한 세제 자금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참석자들도 토론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이어나갈 4차 산업혁명의 주력산업으로 향후 부가가치 창출이 무궁무진하다"면서 "빛가람혁신도시에 한전이 입주한 것은 광주·전남에 더 없는 기회이고, 이 기회를 잘 살려 지역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선호부서 일몰제·보직 경로제 도입

하반기 시행 인사혁신안
광주시는 15일 선호부서 근무기간 일몰제, 보직 경로제 도입 등의 인사 혁신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안 주요 내용은 공직자 모두가 선호하는 인사와 기획관련, 국(庫) 단위 서무부서 등은 3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많은 직원들에게 희망부서 근무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환 전보를 실시하며, 안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보 인사체계를 확립을 위해 보직 경로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교육이나 사업소로 나간 뒤 이어서 국 서무과 등 주요 과로 옮길 수 없다. 선호부서와 일반부서로 구분해 단계별로 보직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실·국내 전보제한 기한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조정해 전보과열 현상을 막기로 했다. 조직관리나 인사 등 선호부서는 기술직렬에게 근무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적공개나 다면평가 등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승진 검증시스템도 마련했다.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주요 비위 행위자는 특별승급이나 승진제한 등 신상발발을 강화했다.
하지만 전보인사에서 각종 재직 기간, 보직 경로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나 발탁인사, 조직 활력 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직원 의견을 들어 초안을 만든 뒤 직렬별·노조 대표 등이 참여한 인사혁신TF 검토를 거쳐 인사안을 마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4·12 재·보선 후보 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5일 4·12 재·보궐선거 해남2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양재승 전 해남 부군수를 공천했다.
여수나선선거구 시의원 후보로는 김승호 여수 국동 주민자치위원장이 확정됐다.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인텔리서치에 의뢰한 국민참여경선에서 양 후보는 최재희 해남 청소년 인권상담소장을, 김 후보는 박장실 국제라이온스 지구 총재

를 눌렀다. 경선은 지난 13~14일 일반 국민 60%, 권리당원 40% 비율 여론조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순천나선선거구 시의원 선거 후보는 지난 6일 1차 심사에서 후보 간 점수 차가 오차 범위를 넘어 1위를 차지한 강형구 전 순천 시의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지역은 재보선 선거구가 한 곳도 없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